



# 비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과 시사점

## SUMMARY

**전망** 한국, OECD 비기축통화국(17개국) 중 국가부채 증가속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

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감('20 ~ '26년)



한국 국가부채비율 순위 변화('20 ~ '26년)



\* 주 1)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·유로·엔·파운드·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(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바스켓 기준) OECD 37개국 중 17개국이 비기축통화국, 20개국이 기축통화국  
 2) 국가부채는 일반정부부채(D2, 중앙·지방정부 + 비영리공공기관 부채) 기준 3) 국가부채비율 순위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순위  
 \* 자료: IMF Fiscal Monitor('21.10월)

**리스크 요인**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, 저출산·고령화, 공기업 부채 등 국가부채 리스크 확대 요인 상존

**과제** 강화된 재정준칙 도입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 조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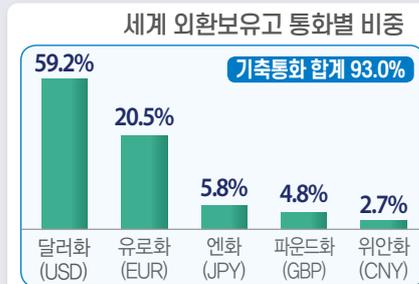
기축·비기축통화국  
부채비율 차이로  
재정건전성 비교시  
구분 필요

### ❓ 국가부채 과다 여부와 재정건전성 비교시 기축·비기축 통화국 구분 필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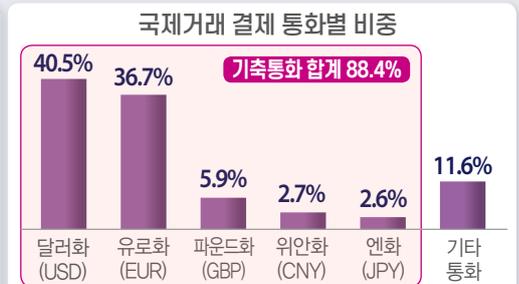
**1 기축통화는 안전자산\*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높고 국가간 무역·자본거래에 널리 통용**

→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 높은 이유

\* 주: 금본위제였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'71년 붕괴되면서,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위축되는 대신 기축통화가 크게 부각



\*자료: IMF, '21.3분기 기준



\*자료: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(SWIFT), '21년 말 기준

**2 기축통화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음에 따라 해당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수요도 증가**

**why?** 기축통화를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기축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함 → 채권 중 가장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에 주로 투자

**3 국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기축통화국 정부의 국채발행량이 늘어나게 되고, 이에 따라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도 증가**

따라서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, 기축통화국의 발권력을 통해 국가부채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비교 시 기축·비기축통화국 구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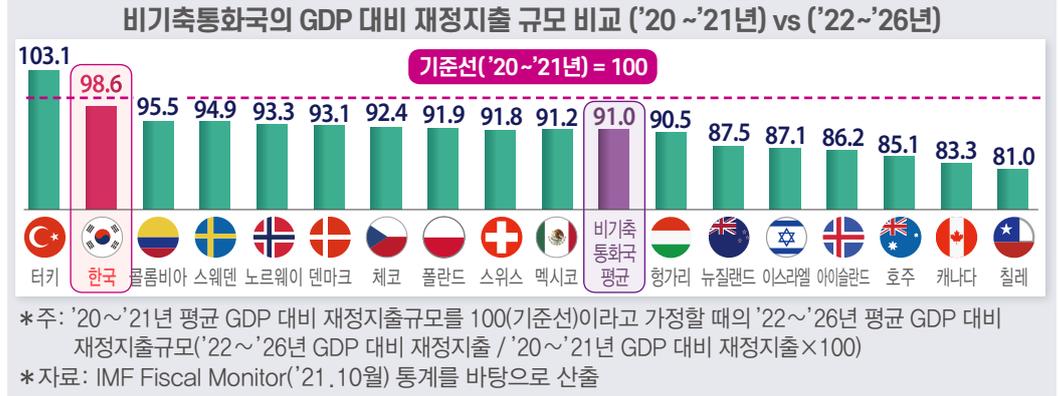
\*GDP 대비 국가부채비율(IMF, '20년): 기축통화국 평균 97.5% > 비기축통화국 평균 56.1%

# 비기축통화국 vs. 한국 중기 재정건전성 전망 ('20~'26년)

## 1 정부 재정지출

- ◆ IMF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('20~'21년) 이후에도 재정지출 수준 유지 전망
- ※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대부분 코로나19發 확장재정 후 재정건전성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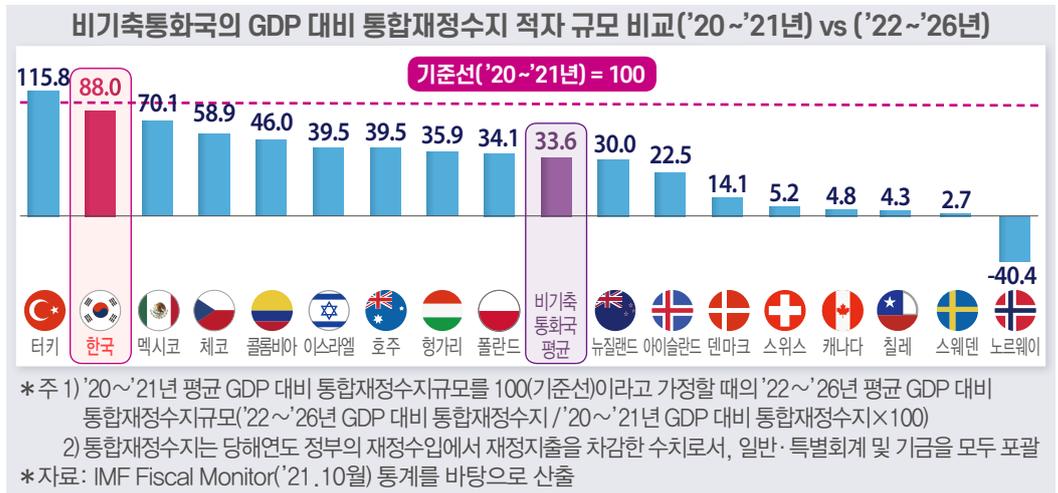
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 계속 유지



## 2 통합재정수지

- ◆ 한국은 코로나19('20~'21년)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 유지
- ※ 노르웨이는 코로나19 이후('22~'26년) 흑자 전환

한국, 재정적자 감소 폭도 가장 작아



###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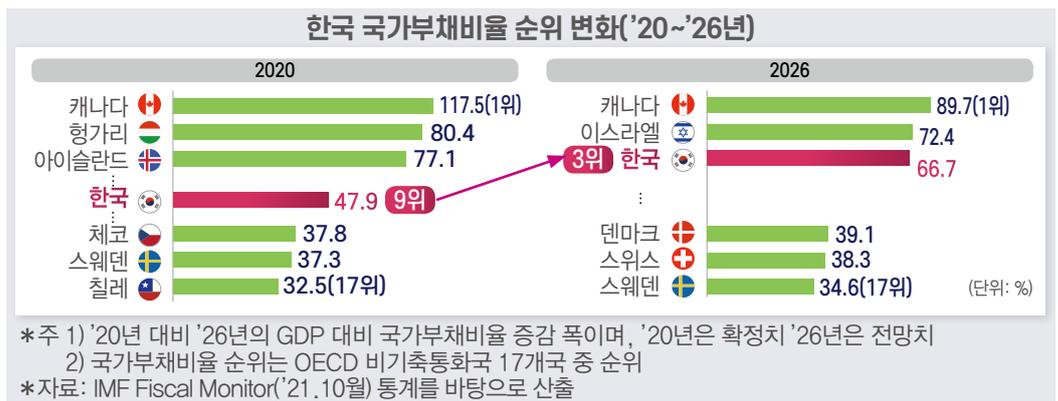
- 💡 재정건전성 비교 시점 구분('20~'21년 vs. '22~'26년)의 근거
- ✖ OECD국 GDP 합계, '22년부터 코로나 이전('19년) 수준 상회하면서 재정부담 완화
- ※ OECD 실질 GDP 추이('19년=100, OECD): 95('20년) → 100('21년) → 104('22년) → 107('23년) → 109('24년)
- ✖ 위드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감소
- ※ 주요국 피해계층 지원예산 감소율('21년 결산 대비 '22년 예산): 미국 △90.5%, 독일 △83.1%, 프랑스 △96.5%

'22년부터 주요국 성장회복으로 재정부담 완화 → '22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변화 비교

## 3 국가부채비율

- 💡 국가부채는 누적된 저량 변수(stock variable)이기 때문에 '20년과 '26년을 단순 비교
- ◆ 한국, 국가부채비율 순위는 6단계 상승(9위('20년) → 3위('26년))
- ※ 한국, 국가부채비율 증가분('20~'26년) 18.8%p(비기축통화국 중 최대) vs. 비기축통화국 평균 -1.0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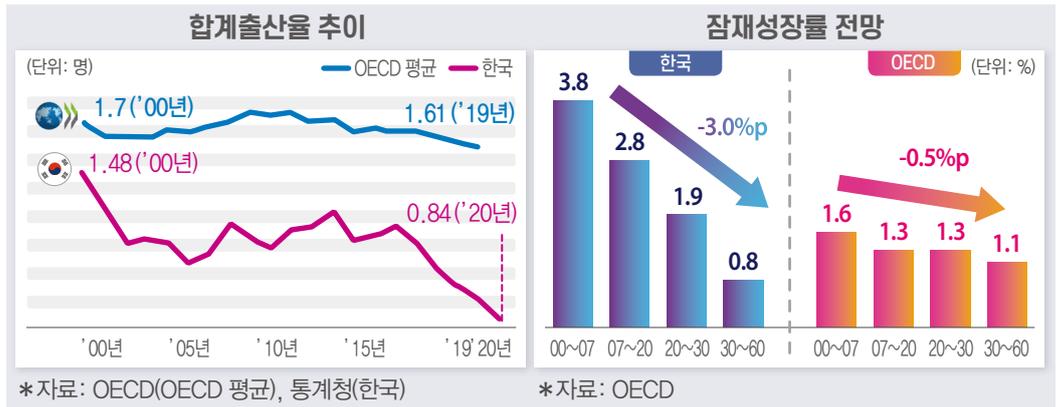
한국, 국가부채비율 급증하며 부채비율 순위도 꺾춤 (9위 → 3위)



# 한국의 국가부채 장기·잠재적 리스크 요인

## 1 저출산 및 잠재성장을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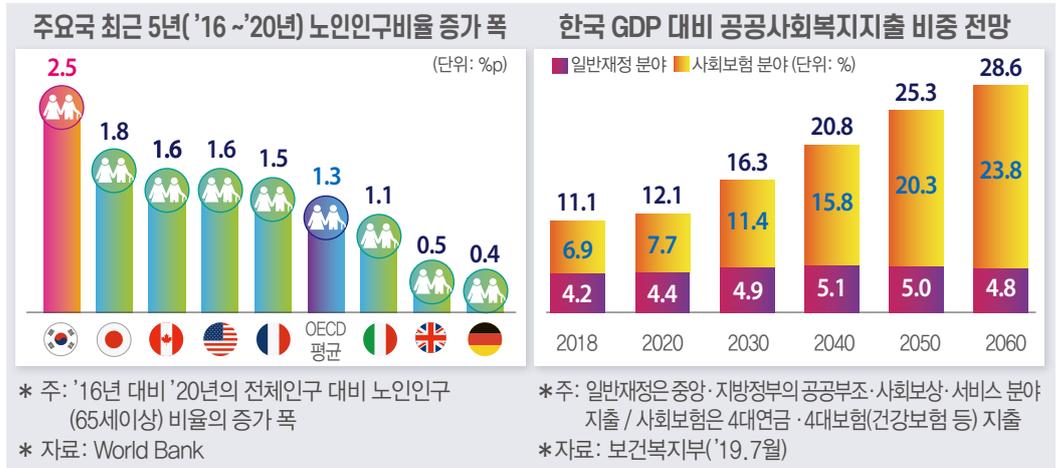
합계출산율 및 잠재성장률 전망 OECD 최저수준



## 2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 급증

※ 한국의 최근 5년('16~'20년) 노인인구비율 증가 폭(2.5%p)은 OECD 37개국 중 1위

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비중 2배 이상 급증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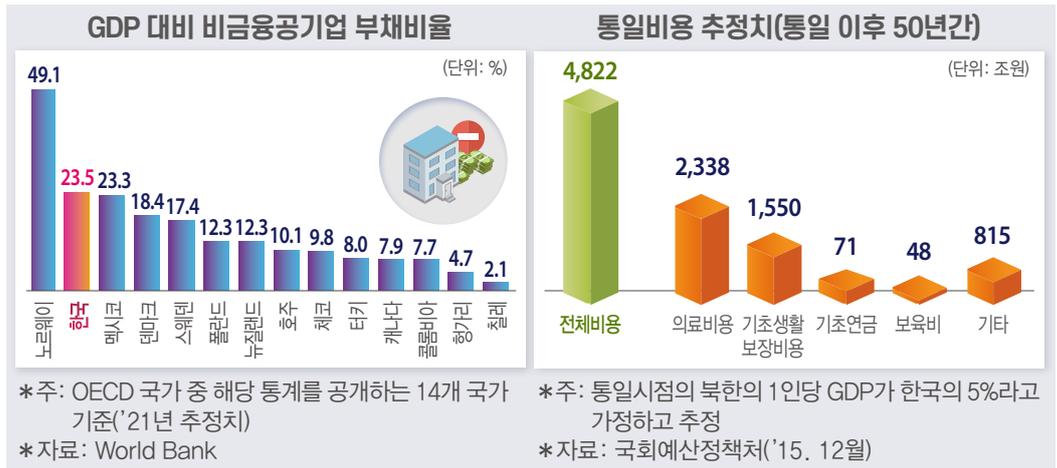


## 3 비금융 공기업 부채와 통일비용 등 잠재적 부채

※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국제 비교 시 사용하는 일반정부부채(D2)에 미포함되나 사실상 정부 부채

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 OECD(14개국 중) 2위

향후 50년간 통일비용 4,822조원



### 쟁점과 체크포인트

- ✓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며,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
  - \* 심화되는 인구감소·고령화로 한국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커,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부채 폭발 방지 위한 재정정책 마련 필요(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, '21.4월)
- ✓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
  - \*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은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(피치, '21.1월)



# 글로벌 싱크탱크 FOCUS



## Americans Mainly Reject Labor Unions

美근로자 (민간기업) 노조가입 거부

Chris Edwards,  
2022. 1. 24

<https://www.cato.org/blog/americans-mainly-reject-labor-unions>

### SUMMARY

#### 1980년 이후 미국 노조가입률은 민간부문 감소세 지속 vs 공공부문 동일 수준 유지

- ❖ 민간부문 노조가입률: 20.1%('80년) → 9.0%('00년) → 6.3%('20년)
- ❖ 공공부문 노조가입률: 35.9%('80년) → 37.5%('00년) → 34.8%('20년)

\*자료: Unionstats

####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조가입 양극화 이유 :

- ① 고용보장 차이: 공기관 인건비 상승해도 고용안정 vs 민간 과도한 임금시 고용 불안
- ② 독과점: 공기관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, 노조로 인한 비용부담 소비자 전가 가능
- ③ 기업수명: 공기관은 민간에 비해 긴 수명주기를 가지므로 노조 역시 장기간 유지



## China's annual GDP figure masks underlying weaknesses

GDP 통계에 가려진 중국경제 숨은 위험요인

EIU  
2022. 1. 19

<https://www.eiu.com/n/chinas-annual-gdp-figure-masks-underlying-weaknesses/>

### SUMMARY

#### 현재 중국경제는 통계가 보여주는 실적치보다 어두운 상황

- ❖ **공식발표** '21년 실질 GDP 성장률 8.1%로 정부 목표치(6.0%) 상회
- ❖ **실제상황 ①** GDP 속보치는 연말 오미크론궤 락다운(시안, 정저우 등)으로 인한 경제타격 미반영
- ❖ **실제상황 ②** 대외수요가 그나마 중국경제를 지지했으나 내수시장이 급속히 악화  
\*중국 소매판매 증가율: 17.7%('21.4월) → 2.5%(8월) → 1.7%(12월)(중국가통계국)

#### 2022년의 중국경제도 위험요인 상존

- ❖ 2022년 중국 민간경제의 취약점: ① 도시 단위의 경제봉쇄 유지 ② 중국 빅테크 기업규제 지속 ③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
- ❖ 중국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가속화할 예정  
\*인민은행은 '22.1.17일 시중은행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0.1%p(2.95% → 2.85%) 인하

